

북한의 대남 도발 사례분석

김성우*

요 약

북한의 도발은 지상·해상·공중으로 다양하게 침투 및 국지도발을 일삼아 왔다. 최근 제1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사건까지 국지전시 합동작전을 보면 북한의 선제 사격 및 도발에 따라 우리 군은 대응 사격위주의 방어만 해왔으며, 항공력의 무력투입은 없었다. 북한의 대남도발 의지와 강도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로 전환되면서도 변화가 없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안겨줄 만한 강도 높은 위기사건만을 중심으로 북한 군대의 의도를 파악해 본다면 그러한 사실이 더 명확해진다. 이제까지의 북한의 도발행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부각된다.

첫째, 시기적으로 도발행태가 변하고 있다. 둘째, 위기사건의 목표를 분석하면 군사적 목적에 의한 도발이 가장 많다. 셋째, 북한은 화전양면전략을 구사한다. 넷째, 도발행위를 은폐하려고 한다. 한반도 위기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마다 북한측은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한국에 의한 조작행위로 비난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북한의 도발은 미국요인과 한국 및 북한 내부요인이 의사결정체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에 의해 자행되었고 대남도발은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러는 북한의 국가전략체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세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The Study on the North Korea's Provocation

Woo Sng Kim*

ABSTRACT

North Korea's provocations is continued. Although Kim Il Sung, Kim Jong Il, Kim Jong Un regime was shifted. The crisis is activated, but that there are no changes. Until now, there are the possibilities of war in the Korean peninsula. If we analyse a major provoked crisis committed by North Korea, the enemy's intention is clear. Since the Korean War, South and North Korea's limited military conflict continued. North Korea's provocative behavior so far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the provocative form has changed variously. Second, the risk analysis of the case, the goal is most often provoked by the military purposes. Third, North Korea is a war and peace strategy on both sides. Fourth, try to cover up the provocation. Each crisis event occurs when the peninsula side of North Korea by hiding his intention to blame the behavior of the operation has been shown to act.

Key words : provocations, military conflict, military purposes, war and peace strategy,

접수일(2014년 4월 29일), 수정일(1차: 2014년 5월 13일),
게재확정일(2014년 5월 24일)

* 동명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1. 북한의 대남 도발 개관

북한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관계를 주도적으로 유발시킴으로써 자기들 스스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세습되는 독재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내부를 결속함과 동시에 남한을 정치·사회적으로 불안하게 하여 남한정부의 정통성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의 분단, 한국전쟁의 기원과 실패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한국 주둔, 남방 3각 관계 구축, 그리고 미국의 동북아전략 등을 안보위협 of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해왔다.^[1] 북한은 남·북한 간의 긴장이 주한미군의 존재로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 국민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주한미군에 대한 거부감을 확산시키고 주한미군을 조기에 철수하도록 하여 한반도의 공산화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 즉 그들이 주장하는 ‘결정적 시기’를 조성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남한을 혼란에 빠지게 하여 북한의 대남 혁명에 유리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대남공작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런 대남공작은 무장간첩을 남파하여 한국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거나 한국 내에 ‘혁명기지’를 구축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런 북한의 도발행태는 결국 남북한 간의 불신, 오해, 상호 불인정, 위협인식, 긴장과 대립 등을 배태하는 주원인이 되어 왔다. 북한의 국지도발은 각종 테러행위(납치·암살, 방화·폭파, 인질극, 독극물 투입 및 독가스 살포 등)이다.^[2]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 주변의 군사적 긴장은 북한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으며 남한은 미국과 같이 북한의 행동에 소극적인 대응을 해왔다. 한반도 주변의 안보상황은 주로 북한에 의해 형성이 되었으며 그 형태와 내용을 다르게 구사하여 왔으며 남·북한의 군사적 갈등구조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태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조치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의 내용과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이 시대적으로 어떤 형태로 변화하여 왔는가를 추적하기 위해 지난 60여 년 동안에 발생한 주요 대남 도발사례들을 추출하여 분석해 보았다. 여기서도 집중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한반도가 군사적위기로 치달았던 주요 사례들이다. 이 사례들을

보고 북한의 도발 패턴과 특징을 분석하고 대비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2. 시기별 도발행태

과거 북한의 도발은 1954~2014년까지 지상·해상·공중으로 다양하게 침투(1,640여건) 및 국지도발(1,020여건)을 일삼아 왔다. 최근 제1연평해전-연평도 포격 사건까지 국지전시 합동작전을 보면 북한의 선제 사격 및 도발에 따라 우리 군은 대응 사격위주의 방어만 해왔으며, 항공력의 무력투입은 없었다.^[3]

그동안 북한은 올해 들어 원산 일대에서 300mm 신형 방사포와 스커드 미사일, 단거리FROG(Free-Rocket-Over-Ground)로켓 등 100여발을 잇따라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벌여왔다. 때문에 이번에 노동계열 탄도 미사일을 평양 북방 속천 일대에서 발사한 것이 천안함과 한·미·일 정상회담을 의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노동계열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1,300km에 달하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해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 등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 이번에 650km를 날아간 것은 북한이 일본의 반발을 고려해 사거리를 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쨌든,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절해 나가는 전략을 계속해서 구사하고 있다.

2.1 1950년대

전쟁이 끝나고 1960년까지 북한은 6·25전쟁으로 인한 국내 후유증을 수습하는 기간으로 사용하였다. 이들은 시간을 벌기위해 대남전략의 방향을 주로 평화공세 선전에 두고 각종 협상을 제안하였다. 이 당시 물론 북한측이 요구한 평화협상에는 외국군 철수 요구, 회의 소집 요구, 평화통일에 관한 선언, 군축 제의, 4개항 통일방안 제의 등이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통해 소진된 물질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대남관계는 한동안 활발하게 전개할 여력이 없이 소강상태를 유지하였다. 해방과 동시에 국가 재건이후 북한은 남한지역에 남로당을 기지로 구축, 각종 무장폭동이나 게릴라 활동을 통하

여 남한을 공산화하려 하였다. 전쟁이후 김일성과 박헌영의 주도권 싸움에서 박헌영과 함께 남로당계를 숙청함과 동시에 대남공작기구와 게릴라 부대를 해체하는 변혁을 단행하였다.

남한지역에 남로당의 활동이 없어지자 그들의 발판이 없어진 가운데 북한은 새로운 대남공작의 방법과 대책을 강구해야 하였다. 이 시기에 북한의 대남공작은 주로 북로계 간첩요원을 남파하는 것에 그쳤다. 그 형식을 보면 6·25전쟁 이전과 전쟁 기간중 대량 남파형식과는 달리 소수를 남파시켰고, 그 교육방법도 집단훈련이 아니라 개별적인 밀봉교육의 형식에 따랐다.

195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북한의 경제건설이 어느 정도 진척된 반면 남한은 정치 및 사회적으로 혼란이 가중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남한의 정치상황이 혼미를 거듭하자 북한의 대남공작은 소규모 간첩단을 중심으로 서서히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간첩단은 학원, 군대, 정부기관 등에 은밀히 침투하여 대남공작의 근거지를 확보하는 단계였다. 그러나, 1958년에 일어난 민간항공기 납치사건은 위기로 인지될 만한 사건이었다. 부산을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1대가 탑승한 6명의 무장괴한에 의해 납치되어 평양에 강제 착륙하였다. 이 비행기에는 28명의 승객, 1명의 미군장교, 그리고 나머지 3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다. 북한은 국제여론에 굴복하여 나중에 승무원과 탑승객 22명을 귀환시켰으나 비행기는 억류되고 말았다.

이 사건은 위기 측면에서 두 가지의 특성을 드러낸다. 하나는 도발 자체가 북한의 무력도발이나 간첩파견 등 북한의 상습적인 도발형태와는 달랐고, 다른 하나는 사건발생 자체가 북한간첩 1명의 조종하에 한국인 5명이 포섭되어 저질러졌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한국 안보에 대한 국민의 수준과 의식을 간접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6·25전쟁을 계기로 한국국민의 안보의식은 전쟁 이전보다 공고해졌지만 아직도 일부 국민이 정신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못하여 북한의 강력한 간첩활동에 유인될 수 있다는 잠재성을 말해 주고 있다. 이 당시의 북한의 대남전략 방향은 전반적인 평화공세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납치와 같은 도발적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북한의 대남정책이 화전양면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잘 알 수가

있다.

2.2 1960년대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 내의 정치상황은 4·19 혁명을 전후하여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졌다. 일부 어설픈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감상적 통일논의가 만연하고 이에 편승하여 혁신계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민의 안보에 대한 의식은 희박하였으며 안보 일체감은 거의 와해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을 잘 활용하여 북한은 자신들의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남 적화공세를 감행하였다.

박정희에 의해 주도된 5·16 군사정변은 북한으로 하여금 대남전략의 기본 방향을 대폭 수정하게 만들었다. 민주당 정부하에서의 정치사회적 혼란이 사라지고 경제발전과 베트남 참전으로 국력신장의 여건이 마련되고 반공정신과 국민들의 일체감을 바탕으로 반공태세와 사상무장이 강화되었다. 남한의 경제적 발전과 의식의 변화에 자극을 받은 북한은 4대 군사노선을 서둘러 추구하고 보다 강경한 대남공작을 전개할 준비태세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1961년 조선노동당 제4차대회는 강경노선의 통일전략을 채택하고 대남공작기구를 통합하며 그 위치를 한 단계 승격시키는 조치를 감행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강경노선을 기반으로 한 호전적 행위는 196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종전의 소극적 대남전략에서 적극적 방향으로 급진화하여 남한에서의 혁명기지 구축이라는 장기적 목표에서 게릴라를 직접 침투시켜 요인암살 및 양민학살을 기도하거나 전면적 군사도발을 자행하였다. 이 중에서도 위기에 가까운 사례는 5건으로서, 유형별로는 정면 군사도발이 2건, 게릴라 침투가 2건, 나머지 1건은 여객기 납치였다. 정면군사도발은 남한의 해군함정을 두 척의 북한 쾌속정이 피격하여 40명의 탑승원이 사망하고 30여 명은 실종된 사건과 미국의 전자정찰함 푸에블로(Pueblo)호가 북한의 쾌속정 4척과 2대의 미그기에 의해 납치된 사건이었다. 이 두 사건은 북한의 군사도발 대상이 북한의 입장에서 한국과 미국 두 나라를 하나의 연합체로 보고 행동했다는 점은 공통점이지만 위협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나타난다. 미국을 상대로

한 경우는 간접적인 형태를 띠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이 미국을 대상으로 강력하고 무자비한 대량학살을 수반하는 위기사건을 만들어 낼 자신감이 아직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시인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게릴라의 직접침투에 의한 두 가지 위기사건 중 하나는 한국의 최고 통치자를 대상으로, 다른 하나는 양민학살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1968년 1월 20일 북한의 124 군부대 소속 무장 공비 31명은 청와대를 기습 폭파할 목적으로 서울에 잠입하였다. 이들은 서울 시내 청운동과 홍제동 지역에서 민간인을 사살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군경 합동수색대에 의해 1명만 생포되고 나머지는 모두 섬멸되었다. 이들을 모두 섬멸하기까지 10여 일이 소요되었으며, 한국 측은 6명의 민간인과 작전 중 최규식 종로서장이 사망하였다. 생포된 김신조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124 군부대는 황해도 연산에 기지를 두고 1개 기지에 300명씩 총 8개 기지로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의 각도를 각 기지가 담당하는 형식으로 훈련을 받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의 무장공비의 공세적인 투입과 활동은 안보적으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전 국민이 하나가 되는 국가안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직장과 마을을 위기시 스스로 방위할 수 있는 향토예비군의 창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 사건으로 한국의 국가 위기 발생시 얼마나 허점이 많은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기도 했다. 31명의 게릴라들이 사건 발생 3일 전 개성을 출발하여 도보로 서울의 중심까지 이르는 동안 3열중대로 유유히 침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당시 박정희 정부가 안보를 국가의 제1 목표로 강조하던 제3 공화국에서도 이러한 침투가 가능하였는데, 만일 북한의 이런 침투가 국내의 안보의식이 상대적으로 해이하던 시기에 일어났더라면 국가존립의 결정적인 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보다 큰 규모의 게릴라들이 직접 침투한 사건은 동년 11월 13일에 발생하였다. 124군부대 소속의 120명에 달하는 게릴라들이 동해안 지역의 울진, 삼척 부근에 출현하여 한국의 대간첩작전 부대와 교전을 벌여 59명이 사살되고 2명은 생포되었다. 한국은 2명의 군인과 6명의 예비군, 그리고 16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북한은 이 지역에 게릴라 근거지를 확보하

여 남한을 극도로 혼란에 빠지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1·21 위기와 형태는 같으나 목적은 요인암살이 아닌 대민관계를 기반으로 게릴라 기지 구축의 가능성을 시험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마지막 위기사건은 1958년에 발생한 것과 같이 민간항공기를 납치함으로써 야기되었다. 1969년 12월 11일 강릉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던 민항기가 북한간첩에 의하여 납치, 원산에 강제 착륙을 당하였다. 이 비행기는 총 51명의 한국인이 탑승했는데, 후에 북한은 39명만을 판문점을 통해 귀환시키고 승무원 3명과 8명의 승객은 강제로 억류하였다. 첫 번째의 납치사건과 비교할 때 이 사건은 북한이 승무원과 일반 승객을 강제로 억류했다는 점이 다르다.

이상 1960년대에 발생한 5가지 위기사건의 특징을 요약하면, 우선 위기의 유형에서 1950년대와는 달리 과감하고 무자비한 무장간첩이나 게릴라를 직접 투입시켜 준 전시상황을 조성하였으며 정면 군사도발이 주종을 이루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위협의 정도가 6·25와 같은 전면전과는 비교되지 않지만 평시 상황에서는 가장 무력적이고 공세적이었으며 심각한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이 지적 된다. 위기사건의 빈도에서는 1950년대 보다는 증가하였고, 주로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2.3 1970년대

1970년대에 들어서 한국은 1960년대부터 지속되어 온 경제성장과 정치체제의 안정으로 국력이 크게 강화되어 남북한간의 국력의 격차는 점차 좁혀지게 되었다. 따라서 정치 및 사회적 지도층을 적대적으로 제외시키고 하부로부터의 민간인들을 포섭하여 남한을 전복하려는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남한을 적화시키려는 전략은 한계가 있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더군다나 1960년대의 직접적인 무장공비와 게릴라 침투전술도 결과적으로 남한 국민의 안보의식을 굳건히 다져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상황이 북한에게 불리하게 되자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이 제의한 남북대화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7·4 공동성명과 일련의 남북회담이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대화를 통해서도 당초에 목

적한 혁명역량의 배양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지자 1973년 8월 북한의 조철위원장인 김영주가 성명을 통하여 남한과의 대화 단절을 발표하였다. 그 후 북한은 대화의 중단 책임이 한국측에 있는 것처럼 국제여론을 오도하는 한편, 대민족회의와 같은 비현실적인 정치협상을 제안하다가 1979년 10·26 사태 이후에는 총리회담이라는 당국자간 회담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남북대화가 공식적으로 단절된 이후 북한은 다시 그들의 의도를 나타내게 되는데 비합법적인 대남공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특히, 김일성의 후계자로 김정일이 등장하면서 대남공작은 한층 강화되어 공작부서의 기구를 강화하고 침투행위에 있어서 대내·외 공작역량을 총동원하였다.

북한은 1968년 124군부대의 무장도발이 실패로 돌아가자, 대남사업총국을 해체하고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이 대남공작을 하도록 하였다. 1970년대에 와서 북한은 1977년 노동연락부 내에 대성총국을 신설하여 대남공작을 관장하도록 하였고, 일본을 간첩침투의 기지로 구축하기 위해 대남대책부를 설치하는 한편, 조총련 중앙조직과 지방조직단체에 대남정치선전공작부를 설치하였다. 이외에도 해외에서의 우회침투하여 대남공작을 강화하기 위해 1970년 통일혁명당을 창설하였다.

1970년대 북한에 의한 도발로 인해 발생한 주요 위기사건은 4건이었으며, 유형별로는 요인 암살기도가 2건, 땅굴 굴착 1건, 그리고 나머지 1건은 관문점에서의 도끼만행사건이었다. 첫 번째 요인암살 기도는 1970년 6월 22일, 북한에서 남파된 무장공비 3명이 국립묘지에 시한폭탄을 장치하여 참배하려는 대통령과 내각수반을 살상하려 하였다. 그러나 폭탄설치중 실수로 인하여 1명의 공작원이 사망하였으며, 나머지 2명은 도주중 김포에서 사살되었다. 이로써 북한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고,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더 갖게 되었다.

두 번째 요인암살 기도는 1974년 8월 15일에 발생하였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일본에서 서울에 침투한 문세광이 8·15 해방 29주년 기념식장에 잠입하여 연설중인 박대통령을 저격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배석했던 육영수 여사가 흉탄에 맞아 사망하였다. 범인 문세광은 조총련계 공작 지도원인 김호령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초의 기도는 동년 3·1절 기념식장을 목표로 하였다.

요인암살을 통하여 한국의 혼란과 공황을 야기하여 국가전략인 적화통일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박대통령 저격사건은 미수에 그쳤으나 영부인이 피살됨으로써 최고통치자로서 국정수행과 정세판단의 차질로 12·6사건을 초래한 결과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4] 이 사건은 북한이 대남공작에 있어서 직접침투보다는 손쉽게 해외를 경유하여 침투함으로써 새로운 대남 전술을 구사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전의 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한국의 안보태세가 휴전선은 물론 국내적으로도 더욱 공고해지게 되자 북한이 비교적 손쉬운 해외침투의 근거지로써의 일본을 중간 경유지로 이용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한편 1974년 11월 5일 서부전선 고평포 지역 비무장지대에 북한이 굴착한 땅굴이 발견되어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이 땅굴은 휴전선 남쪽으로 1.2km나 통과하여 북한의 기습남침용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넓이 90cm, 높이 122cm로 굴착된 이 땅굴은 유사시 한 시간에 1개 연대의 병력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측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그 이후에 1975년 3월과 1978년 10월, 이보다 더욱 큰 규모의 제2·제3 땅굴이 발견되어 북한의 호전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발견된 두 개의 땅굴은 한국측에 더 이상 위기사건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제1땅굴이 발견되었을 때 이미 한국과 유엔은 그와 같이 땅굴이 더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땅굴의 발견으로 여차하면 북한은 소규모 침투에서 대규모 침투로 전환하여 전면전을 계획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1976년 8월 18일 관문점에서 도끼만행 사건이 발생하였다. 유엔군측 보니파스 대위는 9명의 군인 및 5명의 노무자를 인솔, 관문점 공동경비구 내 유엔군측 제3초소 남방 30m 지점에서 사계청소를 위해 미루나무 가지를 치던 중 북한 경비병 30명이 출현, 고의적으로 시비를 걸어 유엔군측 노무자의 도끼를 탈취하여 미군 2명을 도끼로 살해하고 유엔측 경비병 8명에게 중상을 가했다. 이 사건으로 한국측은 5명의 카투사가 중경상을 입었다. 관문점도끼만행사건은 북한의 호전성을 부각시켰을 뿐 아니라 미국은 DEFCON-II(Def

ense Readiness Condition)를 발령하고, 항공모함 ‘미드웨이’호 동해안 파견, 미 공군기 한국 전개 등의 가공할 무력시위로 김일성은 사과를 해야 했다.^[5]

안보 차원에서 이 사건이 가한 위협의 심각도는 그리 높지 않았으나 미국은 이 사건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 미 국무성과 백악관이 성명을 내는 동시에 북한측에 즉각 응징의사를 표명하였다. 미 국무성은 2개 전투 비행대대를 한국에 급파하고 오키나와에 기지를 둔 F-4 전투기 1개 대대와 미국 본토 아이다호주에 기지를 둔 가변익 F-111 전투기 1개 대대를 파견하여 예비 경계조치를 단행하였다. 또한, 8월 20일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도 단호한 응징의사를 발표하자 북한 역시 전군에 전투준비 태세를 명령하였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북한측 김일성의 유감 메시지가 미국측에 전달됨으로써 무난히 종결되었다. 김일성의 공개적 사과는 이례적인 것으로서 수많은 도발사태에 대해 상투적인 억지를 부려 오던 것과는 다른 반응이었다.

1970년대 위기사건은 대체로 전반 및 중반기에 집중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땅굴 발견으로 말미암아 북한의 평화공세는 단지 위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비록 제1땅굴이 1974년에 발견되었지만, 사실상 북한은 한국과 대화를 시도하면서 한편으로 땅굴을 파고 있었음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은 북한측이 야기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 정책적 해답을 제공한다. 즉,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단호한 응징조치가 이루어지면 저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북한은 1976년 이후 현재까지 미국을 상대로 심대한 도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도발을 자행하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2.4 1980년대

이 시기는 국력 차원에서 한국이 북한을 압도하는 시기이다. 군사력을 제외한 기타 국력의 요소에서는 이미 한국이 북한의 수준을 능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북한은 권력이양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국면에 놓이게 된 시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대남전략에서 남북대화의 무드를 이용하여 고도의 화전양면전술을 구사하기 시작

했다. 이 전략의 기본 저의는 남한 국민의 정신적 해이를 조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들의 정책과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대남공작기구에서 북한은 그 동안 한국 내에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대남모략 비방선전에 적극 이용해 온 ‘통일혁명당’을 1985년 7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그 명칭을 ‘한국 민족민주전선’으로 개칭하였다.

1989년까지 위기로 지목될 만한 도발은 1983년 미얀마 아웅산 테러사건과 1987년 김현희의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을 들 수 있다. 북한은 1976년 도끼만행사건 이후 미군에 대한 도발은 중지되었다. 또한 대한항공 폭파사건 이후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어 경제침체의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북한의 도발은 한 반도로 국한되었다.^[6]

1980년대 북한에 의해 야기된 위기사건은 종래의 패턴을 벗어나 새로운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이미 기술한 것처럼 위기발생의 배경이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무대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 외에 사건 자체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국제 테러 수단에 의해 야기된다는 사실이다. 랭군 폭파와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은 위협의 대상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테러 수단에서는 동일한 양상을 보여 준다. 한반도 내에서의 위기와는 달리 북한은 국제적 테러 사건에서는 철저히 그 범행을 위장하려 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두 국제 테러 사건에서 경험한 것처럼 북한의 소행임을 밝히는 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북한의 대남전략이 과거의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형태를 벗어나 잠재적이고 간접적인 방향으로 전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이 대남전략에 있어서 끊임없이 새로운 위협수단을 개발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2.5 1990년대 이후

이 시기는 1989년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어 탈냉전이 시작된 시점부터 김일성이 사망하기까지 북한이 대화와 통일의 공세를 전개한 시기이다. 북한의 안보 위협은 사회주의 국가와 미국으로부터 야기되었다.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민주변혁, 1990년 서독의 동독 흡수통합, 1991년 소련연방 해체는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북한에게 심각한 체제위기로 작용했다. 이를 지켜 본 김일성과 김정일은 큰 충격을 받았고, 권력층 내부에서도 위기의식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한다.^[7]

이 시기에는 무력적인 직접도발이 재현되었다. 잠수함 침투와 같은 해상침투가 있었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하여 개발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IAEA(국제원자력기구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탈퇴를 선언하면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켰다. 이 시기에 2회에 걸친 잠수함 침투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종류의 대남 침투전략이 지속되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가능하였으나 한국의 영토 내에 군사적인 침투 도발 행위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놀라게 한 일련의 도발이었다.

그 첫 번째 행보가 2009년 상반기의 무력도발일 것이다. 4월 5일 미사일 발사, 5월 25일 2차 핵실험, 7월 7일 DDoS(디도스 ;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사이버 공격, 수차례 걸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다양·다변화된 무력시위를 연속적으로 표출하였다. 그 후, 북한이 갑자기 미소전략으로 전환하였으나, 우리가 이에 응하지 않자, 두 번째 행보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사건 및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을 자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이러한 일련의 강성·연속도발을 벌린 것은 핵 개발·보유라는 배경적 자신감이 작용되어서인 것으로 풀이될 수도 있다.^[8]

1994년의 핵위기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 국제사회에서 이슈화되면서 북한은 대외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북한은 협상과정에서 NPT(핵확산금지조약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와 IAEA를 연달아 탈퇴하면서 주변국과 미국 등과 정면 대결 자세를 취하였다. 미국은 이 사태에 대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한 경제제재 결의안을 상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북한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자세로 저항하였다. 이로써 한반도에는 전쟁위기가 고조되었고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을 특사자격으로 방문함으로써 위기상황이 극복되게 되었다. 미국은 이 당시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상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위기상황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불러 올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미국의 주요문서

에서 확인되었다.

1998년 8월 31일 대포동 미사일을 통해 일본지역으로 발사함으로써 강성대국을 표방하였다.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대포동 1호 시험발사는 최종결과가 실패로 귀결되었으나, 사거리 2,500km의 3단계 로켓을 사용한 것으로 미사일 기술의 획기적인 진보를 과시한 것이다.^[9]

두 차례에 걸친 잠수함 침투사건은 위협의 강도는 전쟁이라는 수준으로 보면 그리 높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준비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1999년의 제1서해교전은 북방한계선을 월선한 북한경비정을 한국 함정이 밀어내기식 작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한 경비정의 선제공격으로 교전이 시작되어 북한의 어뢰정 1척이 침몰되고, 경비정 4척과 어뢰정 1척이 손상되었다.^[10] 이 도발은 한국과 북한해군의 첫 번째 교전으로 한국 해군의 우수성이 평가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수십년 동안 남북한 양측이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해왔던 북방한계선을 영해문제로 부각시키려는 북한의 전술적 의도를 나타낸 도발이라고 볼 수 있다.^[11]

2001년 6월에 북한 상선에 의한 북방한계선 침범사건은 새로운 유형의 도발사례로 기록될 만한 것이었다. 그 이전에 북한 상선이 제주해협을 무단 통과한데 이어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동해와 서해에서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였던 것이다. 북한측은 제주해협이 국제해양법에 따라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항로라는 논리를 내세워 영해 통과를 감행하였다. 한국은 정전체제하에서 북한선박에 대한 무해 통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러한 강경 대응 조치가 이루어지자 북한은 한걸음 물러났다. 이 사건에서 한국이 무력대응을 주도하였다더라면 남북한간 무력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볼 수 있다.

2002년의 제2 서해교전은 1999년의 제1 서해교전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발생하였다. 제1 서해교전에서는 한국해군이 북한을 압도하였지만 서해교전에서는 북한해군이 한국 함정에 대한 공격을 주도하는 형식이었다.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 2척 중 1척이 한국해군 고속정을 기습적으로 공격하면서 30여 분간

치열한 전투상황이 벌어졌다. 북한의 기습공격에 한국군은 고속정 한 척이 침몰하고 4명이 사망, 19명이 부상했다. 북한도 경비정 한 척이 불에 타면서 퇴각하였으며 다수의 부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역시 남북한간 무력충돌로 연결될 위험성이 높았으나 한국측에서 강력한 무력대응을 자제하면서 극단적인 위기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북한에 의한 강력한 무력도발은 2009년과 2010년에 발행했다. 대청해전은 서해 대청도 인근 북방한계선을 월선한 북한 경비정 1척이 한국해군 고속정에 조준사격을 했다가 집중포화를 받고 퇴각한 사건이다.^[12] 천안함 폭침사건은 백령도 근해에서 초계임무를 수행하던 천안함이 폭침(2010. 3. 26)되어 46명이 전사한 사건으로, 국내·외의 전문가로 편성된 정부의 민·군합동조사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하였음을 공식 발표하였다.^[13] 천안함 폭침 이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북한군은 대낮에 연평도의 군부대뿐만 아니라 무방비 상태의 민간이 거주 지역에도 170여 발의 무차별 포격을 가해(2010. 11. 23) 민간이 2명과 군인 2명이 사망하였다.^[14]

북한해군의 경비정이 월선하는 것 이외에 어선, 목선 및 철선, 예인선 등 북한 선박들이 북방한계선을 월선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선박들이 월선하는 것은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조업 중에 욕심이 지나쳐 북방한계선을 넘는 경우도 있다고 보므로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행위들로 인해 북한 해군 함정이 월선하는 경우가 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남북한 해군의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위기관리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된다. 문제는 북한측이 이러한 행위를 통해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전략적 의도를 관철하려 한다면 남북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최근 기습적인 노동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미·일 정상회담 등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이 강하지만 중전과는 차원이 다른 실질적 군사 위협 능력을 과시했다는 측면도 있다. 북한은 우선 3국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시간에 정확히 맞춰 미사일을 발사하여 3국의 북핵 공조 강화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초부터 북한이 8차례에 걸쳐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로켓은 단

거리였다. 이에 대응하여 정찰감시능력과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주요 도발 사례>[15]

연 대	발 생 일	유 형
1950년대	1958. 2. 16	여객기 피납
1960년대	1967. 1. 19 1968. 1. 21 1968. 1. 23 1968. 11. 13 1969. 12. 11	해군함정 피격 청와대 기습 푸에블로호 납치 무장공비 침투 여객기 피납
1970년대	1970. 6. 22 1974. 8. 15 1974. 11. 15 1976. 8. 18	국립묘지 폭파기도 대통령 저격기도 여객기 피납 판문점 도끼만행
1980년대	1983. 10. 9 1987.11. 29	랭군 국립묘지 폭파 대한 항공기 폭파
1990년대	1994. 6. 13 1996. 9. 17 1998. 6. 22 1999. 6. 15	핵위기 잠수함침투 잠수함침투 제1서해교전
2000년대	2001. 6. 2 2002. 6. 29 2009. 11. 10 2010. 3. 26 2010. 11. 23	북한상선 영해침범 제2서해교전 대청해전 천안함피격 연평도 포격

3. 대남도발의 특징

정규작전과 달리 국지도발에 있어서 능률적인 합동작전 수행을 위해 사전배치전력, 신속대응전력 및 전략적 예비를 운용하고, 위협유형별로 주도전력과 지원전력을 지정하며, 정부 및 민간요소를 통합운용하여야 한다.^[16] 그 시기별 북한의 도발을 분석해보면 6·25전쟁 정전협정 이후 북한의 대남 군사적 도발은 지속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 전쟁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위협은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략 20회 정도로 간주할 수 있다. 비교적 위협의 정도가 심각했던 북한의 도발을 중심으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3.1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유형

북한은 군사적 습격, 무장간첩 침투, 요인암살과 저격, 잠수함 침투, 땅굴 굴착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시대적으로는 1960년대 전반기까지는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육군을 중심으로 군사적 습격과 납치를 감행하였으나 1960년대 후반기에는 군사적 습격뿐만 아니라 무장간첩을 침투시켜 게릴라전을 시도하여 남한을 그의 전쟁상태로 유도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게릴라전을 활성화한 것은 북한이 나름대로 월남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반도에서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달성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무력적화 통일전략이 실패하자, 그 이후에는 소규모의 무장간첩을 계속 침투시킴으로써 한국 내에서 정치·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조성하면서 반미감정을 고조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고 심리적 공세를 전개하였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한과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격차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전략전술 즉, 테러에 의한 상대적 열등감을 해소하고 남한의 급격한 경제발전에 대하여 급제동을 걸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본다.

이와 같이 북한의 군사도발 형태는 최초 군사분계선 일대의 습격과 같은 직접적 군사행동에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군사적 목표를 한국의 내부로 변경하였던 무장간첩단의 침투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그 계획마저 실패하게 되자 국제적 차원에서 한국의 주요 인사와 주민에 대한 테러를 국내·외에서 감행함으로써 고도의 군사적 심리전을 감행하였다. 이런 가운데 1990년도 제4 땅굴 발견으로 인하여 북한은 군사분계선을 돌파하여 전면전에 의한 무력 적화통일을 추구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3.2 위기도발의 유형

북한이 위기 조성파 도발의 유형을 살펴보면 군사적 정면충돌, 무장 게릴라 침투, 무장간첩에 의한 습격이나 테러, 땅굴 굴착과 같은 잠재적 위협 등으로 앞에서 설명한 군사적 도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위기의 요인은 직접적 군사적인 것 뿐만 아니라

간접적·심리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은 위협의 대상으로서 군사적 목표, 정치적 지도자, 일반 시민을 선택함으로써 그들의 무자비한 군사적 행동을 노출시켰다. 위협의 정도면에서 가장 심각했던 사례는 청와대 기습사건이었으나 실질적으로 한국 정부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으며,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은 상대적으로 위협의 정도는 낮았지만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미국의 대응이 강경했던 점에서 기인하였다. 이는 한반도의 위기구조가 남북한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체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3 시대별 도발의 특징

1950년대에는 6·25전쟁 이후 여객기 피납과 같은 소규모의 테러 사건에 머물렀고, 1960년대는 무장 게릴라 침투, 군사적 정면도발, 여객기 피납 등 다양한 도발형태가 나타났으며, 1970년대는 요인암살, 군사적 정면도발에 참가하여 땅굴을 통해 정면침투의 위기를 조성하였다. 1980년대는 주로 군사적 정면충돌을 회피하고 국제적 무대로 옮겨 테러를 자행하고, 한반도 내에서도 고도의 심리적·군사적 수단을 사용하여 위기를 조성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잠수함 침투, 핵 위기, 해군교전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도발행위를 생성시켰다.

이러한 시대별 위기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지금까지는 한반도 내에서 무력도발과 심리전을 병행하였지만, 앞으로는 한반도 내에서 직접적 군사위협 행사를 지양하고 국제 테러집단과 연계한 비밀결사대 조직을 활성화하여 테러를 한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서 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탈북자를 활용한 각종 간첩행위나 테러행위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4. 결론

북한의 대남도발 의지와 강도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로 전환될 때마다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으나 현재 돌이켜 보면 기본 기조는 전혀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가 있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전쟁위

힘을 안겨줄 만한 강도 높은 위기사건만을 중심으로 북한 군대의 의도를 파악해 본다면 그러한 사실이 더 명확해진다. 북한의 주요 위기도발 양상은 남북한 관계가 첨예한 대립을 이루거나 화해국면에 들었을 때를 가리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까지의 북한의 도발행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부각된다.

첫째, 약 10년 단위로 도발행태가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남한에 대한 도발행위는 군사적 습격, 무장간첩 침투, 요인암살, 잠수함 침투, 땅굴 굴착, 국제테러 등 다양한 형태로 분류된다. 이러한 도발행태는 1960년대의 무장 게릴라 침투, 1970년대의 소규모 무장간첩 침투, 1980년대의 국제 테러, 1990년대 이후의 한반도 내부에서의 군사적 침투 및 도발 등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남한을 적화시키겠다는 전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자신들의 여건과 주변의 상황변화에 따라 도발행태를 새롭게 개발하여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위기사건의 목표를 분석하면 군사적 목적에 의한 도발이 가장 많다. 그러나 사회혼란을 목적으로 행동한 도발과 정치 지도자의 암살을 기도하고, 민간 항공기를 폭파하는 등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행위까지 자행함으로써 남한 내부의 혼란을 조성하려고 하였다.

셋째, 대화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무력도발을 하였다. 기록들을 분석해보면 북한의 무력도발은 남북대화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졌다. 김대중·노무현정부가 햇볕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중에도 1999년에는 서해상에서 한국 영해를 침범하고 남북정상회담 이후인 2001년에도 북한 상선에 의해 영해를 침범하거나 서해교전을 야기였다. 이러한 행위는 북한의 대남정책이 남한의 적화통일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대화는 오로지 자신들이 필요하거나 의도를 숨기려고 할 때 활용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넷째, 북한은 그들의 무력 도발을 숨기려고 한다. 북한측에 의해 자행된 한반도 위기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북한측은 자신의 의도를 축소하거나 은폐시키고 한국이나 미국이 조작행위로 비난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명확한 증거가 있는 잠수함 침투표류사건에 대해서도 북한은 자국의 잠수함이 표류하였다고 강변하였다. 북한이 자행한 도발행위 중에서 숨기기가 어려

운 것에 대해서는 미국과 남한이 합작하여 발생시킨 군사적 긴장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미군 철수, 평화체제 구축 등 정치 선전의 장으로 유인하려고 했다.

결국, 한반도 위기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마다 북한측은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남한이 모든 사태를 조작 날조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일련의 사태와 북한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북한의 도발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포기하도록 하는 주장과 남한의 대북한 정책 및 북한 내부요인이 의사결정체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군사·비군사적 수단에 의해 자행되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행위는 그들의 대남전략이 적화통일이라는 것이 명백한 것이며 북한의 내부체제를 선군정치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공세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단기적으로 비군사적 수단을 이용한 공세가 이어질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군부에서 주장하는 군사력을 활용한 비타협적 강경노선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북한의 예상되는 각종 도발에 군사·비군사적 대응태세를 유지하면서 특히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도발 가능성이 높은 서해도서 방어와 사이버전에 대비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들과 공조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고 현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대북정책 마스터플랜을 차분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현 정부가 보이고 있는 대북 압박과 제재를 지속하는 기초를 유지하되 우리 정부는 한편으로 모든 것에 대하여 논의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신감을 북한에게 보내야 한다.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 통과와 북한을 대상으로 한·미 군사훈련 등 위기국면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차선의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기국면에서는 아주 작은 사건도 증폭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대북 정책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

참고문헌

- [1]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북한의 국가전략』,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총서1(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pp.92-93
- [2] 공군본부, 『공군교범 0-2-5(20) 국지도발 대비작전』, (대전; 공군본부, 2001), pp.9-10
- [3] 국방부, 『국방백서 2010』, (서울; 국방부, 2010), p. p.250-267
- [4] 박헌욱, “북한의 대남도발 반세기”, 『군사논단』, 제14호 및 제15호(서울; 한국사학회, 1998)
- [5] 한국반공교육원, 『북괴만행40년』, (한국반공교육연구원, 1984), p.483
- [6] 김태준, 『테러리즘; 이론과 실제』, (서울; 붕명, 2006), p.275
- [7] 강병도,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 (서울; 중앙일보사, 1995), p.170
- [8] 권태영, “천안함 이후 우리의 역-비대칭 전략 및 정책방향”, 『국방정책연구』, 제26권 제3호 2010년 가을(통권 제89호, 2010), pp.55-56
- [9] 박대광·김진무, 『김정일 정권의 생존전략평가와 향후 전망』, 국방정책 전문연구시리즈 2011-12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1), p.117
- [10] 국방부, 전개서, pp.252-253
- [11] 김인태, “북한의 대남 도발사례 분석 및 전망”, 『군사논단』, 제63호, (서울; 한국군사학회, 2010년 가을), pp.36-37
- [12] 국방부, 전개서, pp.255-256
- [13] 대한민국정부,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pp.142-143
- [14] 국방부, 전개서, pp.255-259
- [15] 국방부, 전개서, p.250
- [16] 합동참모본부, 『2012-2026 합동개념서』, (서울; 합동참모본부, 2010), pp.73-74

[저자소개]



김 성 우(Kim, Sung Woo)

1983년 2월 학사
2004년 2월 석사
2011년 8월 박사
현재 동명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email : tiger@tu.ac.kr